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식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협약서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전공대 설립 '한 고비' 넘었다

광주시·전남도·한국전력 '기본협약' 체결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공사는 4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기본협약식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전남지사과 도의회 의장, 한전사장 등이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기본협약서는 한전공대의 조속한 개교 목표 달성 노력과 지원, 지자체의 입지선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수용, 향후 대학

인프라 조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협약서에는 입지 선정에 따른 지자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학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산업을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정부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공대 부지는 현재 최적의 입지 선정

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한전 용역사에서 '입지선정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양 지자체에서는 후보지 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후보지 추천 이후에는 전문가위원회 산하 심사위원회에서 각 후보지에 대한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월 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임헌정 정책평가과장은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간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상호 협력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성공적 이행을 위한 대응적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석 기자 nicepen@

광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전년보다 35% 늘어난 558억원 투입 2만363명 일자리 제공

광주광역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 광주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총 558억3000만원을 투입해 2만36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411억5500만원, 1만

5899명)에 비해 예산은 146억7500만원(35.6% 증)이, 참여자 수는 4464명(28.1%)이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1만6059명, 시장형 2765명, 인력파견형 1047명 등이며, 올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에도 492명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된다.

특히 2019년에는 그동안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장애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질서지킴이' 사업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 및 전통놀이 체험을 도와주는 '구러기 놀이대장' 사업 등 따뜻한 복지와 세대 간 통합을 구현하는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시행한다. 각급 학교 화장실 청소업무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우리학교 갈끼미' 사업도 교육청과 협조해 대상 기준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도심 속 보물 같은 생태계” vs “우리는 개발을 원한다”

광주 황룡강 장륙습지 보호지역 추진 두고 돌로 나뉜 시선

광주 황룡강 장륙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정밀조사 단계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보호 가치가 뛰어난 조사 결과 나왔지만, 개발과 성장에 방점을 두고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6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한 황룡강 장륙습지 정밀조사에서 '보호 가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 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점까지 약 3km에 이르는 장륙습지는 원시적인 자연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광주시는 습지 보전 필요성을 인식해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광주녹색환경지연센터에 사전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수달·삼·말뚝가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과 황조롱이·새매 등 천연기념물 5종이 장륙습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017년 10월 환경부에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열 달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역시 광주시 사전조사와 다르지 않았다.

장륙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식물과 천연기념물 등 850여종 생물자원의 보금자리로 확인됐다.

국가 습지보호 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지정 기준으로 삼는다.

지정권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있다.

정밀조사에 이어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계획서 및 지형도(면적 및 범위 설정) 작성,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지정·고

시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전국에는 현재 45개의 습지가 국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면적으로는 총 36만6천692ha다.

광주시와 국립습지센터는 생태계가 단절된 도심에 자리한 장륙습지의 지리적 여건에 특히 주목했다.

장륙습지 생물 다양성이 기존 보호지역보다 월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도심에 자리한 국가 보호 습지는 지금껏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습지센터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정밀조사 결과에도 환경부에 장륙습지 지정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정밀조사 과정에서 잇따라 제기된 반대 여론 때문이다.

장륙습지 주변에는 신도심인 선운지구와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광주송정역과 타이어공장, 오랜 도심도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광산구는 황룡강 둔치에 축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장륙습지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환경부를 감독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도 광산구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기관별 의견 청취는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규제를 우려

하는 시의원과 주민 등의 집단행동으로 차질을 빚었다.

국립습지센터는 반대 여론 속에서 장륙습지의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광주시에 전달했다.

국가 습지보호 구역 지정 절차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 건의가 제기된 지역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환경부 예산 범위 안에서 1년에 한두 곳 정도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장륙습지의 보호 필요성을 알리고 국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 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으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국립습지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에서 습지 73곳이 사라지고 91곳은 면적이 줄었다.

개발행위가 아닌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습지가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17곳)에 불과했다.

국립습지센터 관계자는 "개발 논리로 반대해 부딪혔던 습지보호 구역 지정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찬성으로 돌아선 사례가 있다"며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습지로 지역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클 텐데 주체가 분열된 상황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산=고훈석 기자 ghs@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륙습지 일원에서 새가 날갯짓을 하고 있다.

謹賀新年

www.kps.co.kr

Perfect & Pride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전KPS가 힘차게 달립니다!

고객의 가치를 최고로 여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비가공기술력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국민의 기업 한전KPS!

2019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